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fktulib@inochong.org
	정의로운전환, 일자리보호실천단		임옥영 02-6277-0067		

“지속가능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하다!”

-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 「직역연금간 형평성 확보」 정책제안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의제실천단은 한국노총 산하조직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책간담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로운전환·일자리보호실천단,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자!”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노동존중선대위 정의로운전환·일자리보호실천단)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에너지 민주주의와 공공성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은 5월 28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정애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국회 기후특위 위원장)과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 강석윤 단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정에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정책협약이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정의로운전환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담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청년이 배제된 문제를 상기시키며 “제3기에 노동계에서 한분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더 많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석윤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 단장은 “이번 대선이 기후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 석탄화력발전노동자들과 항만 하역노동자들 및 지역주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에서 석탄화력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발전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석탄 하역을 담당하는 하역노동자들과 지역도 함께 무너진다”면서 “기금을 통한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원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은 한국노총 산하 모든 회원조합이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3월 구성되었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정의로운전환·일자리보호실천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위기대응실천단은 ▲기후위기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후위기 전문가 포럼 개최 ▲정의로운 전환 3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선 정책 요구 ▲기후정의행진 참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교원·공무원 기본권 실천단, 직역연금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은 28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노총 별정우체국 조합원들과 ‘직역연금간 형평성 확보’ 정책제안식을 진행했다. 직역연금간 형평성 확보와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대선승리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별정우체국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직역연금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우체국은 60여 년 동안 도서·산간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공공서비스의 최일선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노후보장과 연금수급 측면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주요 직역연금 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별정우체국연금만 해당 제도에서 배제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특수직연금 연계제도에서 배제된 별정우체국 직원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 합산제도에 이들의 근무경력을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오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안의준 전국우정노동조합 별정전담국장은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직역연금 합산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범 노동존중국민특보도 “지난 노동절에 더불어민주당과 노총 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을 포함한 핵심의제 6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억압적인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외진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외관상 민간기관의 형태라고 하여 이를 재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며, 오늘의 직역연금 의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 겸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홍배 의원도 “최근 18년 만에 연금 모수 개혁이 있었고, 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연금 문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과 형평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끝으로 행사를 주관한 안의준 전국우정노동조합 별정전담국장은 별정우체국연금의 형평성 확보와 별정우체국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

붙임: 1. 정책협약서
2. 현장사진

붙임 1. 정책협약서

정의로운 전환 실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실천단」은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실현과 일자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공동의 실천과 협약 이행을 약속한다.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수립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고용대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 실천한다.
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에너지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소 항만 하역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방안을 모색한다.

2025년 5월 28일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대응실천단 단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붙임 2. 현장 사진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정의로운전환·일자리보호실천단)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정의로운전환·일자리보호실천단)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교원·공무원기본권보장실천단 주관 「직역연금간 형평성 확보」 정책제안식



▲교원·공무원기본권보장실천단 주관 「직역연금간 형평성 확보」 정책제안식